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안 연구 - 요약보고서 -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제2장 먹거리 관련 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1. 대내외 여건 변화 5
2. 주요 이슈 9
3.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15

제3장 국내 먹거리 정책 현황과 추진 실태

1. 추진 실태 17
2. 주요 먹거리 계획 부문별 추진 내용 20

제4장 국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1. 먹거리 가치와 기존 정책 인식과 평가 33
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에 대한 인식 35
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세부정책 평가 36
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역량 평가 38

제5장 해외 주요국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현황 41

제6장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과 전략

1. 수립 방향 45
2. 세부 추진전략 48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먹거리와 관련된 경제, 사회, 과학, 기술 측면에서의 제반 여건들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먹거리가 생산된 이후 유통, 소비를 거쳐서 폐기에 이르는 과정과 이에 따른 일련의 활동들이 복잡화·대규모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제기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은 물론 경제·사회 등 다방면에 미치는 중요성과 파급력도 증가하고, 국민의 먹거리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과거에는 먹거리 관련한 이슈가 주로 생산·공급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이슈의 영향력·범위도 크지 않았음. 그러나 먹거리가 생산된 이후 소비·폐기에 이르는 과정·경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주체·영역들이 결부되며, 먹거리가 단순히 식량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중요성을 가지게 됨. 이에 따라 먹거리 관련 이슈의 범위도 식량안보, 식품안전은 물론 건강·영양, 복지, 환경

등으로 확장되고, 이슈 간 상호 연관성 및 파급 영향도 커지고 있음.

- 먹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생산·공급적 관점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먹거리 관련 문제의 해결방식과 정책적 접근은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따라 생산·공급적 관점의 기존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먹거리 이슈에 대한 관련기관별·단계별 또는 영역별 분절적인 정책 접근에서 탈피하여 먹거리 관련 분야 간 정책 연계 또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기존의 먹거리 정책은 영역 또는 정책 간 상호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기관)별·부서별, 정책분야별로 개별적·독립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비전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일관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종합적인 정책성과를 달성하는데도 한계를 노출하였음.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소비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함.
- 그간 종합적으로 먹거리 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시도·노력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식품안전, 식생활교육 등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개별적·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시도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밀라노 국제 엑스포에서 51개국 117개 도시가 ‘밀라노 도시 푸드정책 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을 체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지역들을 중심으로 식생활·영양, 공급·유통, 폐기 등 먹거리 관련 영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추진에 관한 논의·움직임이 본격화됨(지역 푸드플랜,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단위에서의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가단위에서도 국가 먹거리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

기 위한 종합적 먹거리 정책(국가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논의·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구체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국가단위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이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본격화됨.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실무단을 운영하여 핵심아젠다(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중임.
-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비전하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먹거리 관련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의 생산·공급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일관된 비전하에서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 먹거리에 관한 아젠다를 구체화하여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내외 먹거리 정책 검토,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및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먹거리에 관한 국가 종합 비전을 담아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부문별 정책과제·수단, 성과목표·지표 등을 발굴하는 것임.

제 2 장

먹거리 관련 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1. 대내외 여건 변화

1.1. 인구 구조 급변

- 2000년대 이후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2001년 이후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 비중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는 2017년 말 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함.
- 경제사회 및 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저출산, 고령화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인구 성장률 둔화로 2031년을 정점으로 총 인구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17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국면에 진입하면서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개인 및 가

구는 물론 국가 전반에 경제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 지속 가능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음.

1.2. 소득 불평등 심화

-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은 1990년 1,134만 원에서 2010년에는 2,556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2017년에는 3,065만 원에 달함. 그러나 지속적인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도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인층(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소득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삶의 질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지는 못함.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이하 종합지수)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음.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1인당 GDP와 종합지수 간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1.3. 지역 간 불균형 확대

- 저출산·고령화 및 기타 경제사회적 요인들의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에 대한 영향이 농업·농촌에도 미치고 있음. 농가 수와 농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가 수는 1970년 248만 호에서 2016년 107만 호로 약 141만 호가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1,442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약 47년 만에 1,192만 명이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485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356만 명이 감소함.

- 정주 여건, 경제활동 여력 등의 차이로 인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인구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에서도 읍 지역과 면 지역 간 인구 격차도 확대되면서, 특히 읍 지역의 과소화 경향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지방소멸 추세가 농어촌 낙후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촌·농업인구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함. 농가소득(월평균 소득 기준) 수준은 전국 가구(비농어가) 또는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이들 간 소득수준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농촌 지역 내에서도 소득불평등화가 심화되고 있음.
-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농촌(읍·면)지역 거주 가구 비중이 도시(동)지역 비중보다 높은 편임(이계임 외, 2017). 2016년에 전체 가구의 21.2%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데 비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29%) 이하인 가구의 읍·면지역 거주 비중은 29.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됨.
- 농업·농촌 인구 구조 변화와 취약성은 기초 먹거리의 안정적 제공을 포함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에서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1.4. 농식품 수입 확대 및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

-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입의 증가세가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교역은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처해있으며, 적자 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세계 곡물 생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변동 주기가 빨라지고 있음. 곡물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곡물관련 제품의 생산비용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식품 소비자가격의 상승이 초래됨. 이에 따라 곡물 생산·가격의 문제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적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1970년대 초반에 발생한 식량 과잉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밀, 옥수수, 콩, 쌀 등 주요 곡물의 수급 추이가 세계적으로 안정적이었음. 그러나 2007~8년의 이상기상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바이오 에너지 및 사료용 곡물 수요가 증대되는 등 곡물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고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됨.

1.5. 저성장 시대 직면

-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대 이후부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한국 경제도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2~3%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음.
- 2010년대 이후부터 이어진 경제 저성장과 함께 한국 경제는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저고용·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청년층의 취업은 취업 여부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중요한 문제임.

1.6.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이후 전세계적으로 관련 논의와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산업별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 농식품 부문에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과 관련 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가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 주요 이슈

2.1. 식량의 안정적 공급 미흡

-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며, 특히 2007~2008년의 세계 식량위기 이후 국가 안보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짐.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임. 이에 따라 해외 농식품 관련한 제반 여건 변화가 국내 안정적 식량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국내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6년 식량자급률은 50.9%로 주요 작물인 쌀의 높은 자급률이 식량자급률을 지지하고 있음. 특히 사료 작물을 포함할 경우 곡물자급률은 25%내외에 불과함.
- 식량의 구입과 공급, 사용 능력 등을 종합한 식량안보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09개 국 중에서 2012년에는 21위였으나 2017년에는 24위였음. 특히 세부평가항목 중에서 품질·안전에 대한 평가는 조사대상국 중에서 17위였으나 접근성 22위, 부담가능성은 35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2.2. 영양 불균형 심화

- 국가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적인 측면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트륨 섭취는 과잉인 반면, 칼슘 섭취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과일·채소 섭취는 부족한 반면, 음료·주류 등의 가공식품 섭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국민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는 등 불규칙·불건전한 식생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침식사 결식률은 2005년 19.9%에서 2015년 26.1%로 증가하였으며, 19-29세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자는 51.1%, 여자는 46.9%에 달함. 가구당 월평균 가공식품 구입비는 2005년 23.7%에서 2015년 38.0%로 증가함. 영양섭취 불균형으로 인해 식이관련 질병 유병률이 증가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2.3.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미흡

- 국민의 먹거리 보장은 개인의 삶의 질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경우 국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임.
- 국민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 증가, 여성가구주 가구 및 단독가구 증가 등 가구 유형이 변화하면서 빈곤율이 확대되는 추세임. 특히 취약계층은 60대 이상 연령층 비중에서 매우 크며, 고령화와 함께 확대되는 추세임.
- 취약계층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은 낮은 수준이며, 소득기준 계층 간 식료품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부

분 영양소가 권장섭취량 미만으로 섭취되고 있음.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은 모든 식품류에서 섭취량이 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과일류/채소류 섭취 부족자 비중은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함.

- 특히 소득 수준이 취약한 계층에서 식생활 불안정성이 심각함. 식품안전 단계에 있는 소비자 비중은 전체 90.9%이나, 수급자는 66.9%, 비수급자 82.4%임. 특히 식품 불안 단계에 처해있는 수급자 비중은 33.1%에 달함.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자는 주관적 건강인지, 저작 상황, 삶의 질 평가수준도 크게 낮은 편이며, 영양섭취 수준이 권장량에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건강한 식생활 관리 부족의 영향으로 비만율과 대사증후군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2.4. 환경·폐기 문제 심화

- 화학비료와 농약 고투입 영농, 대규모 집단축산에 의한 가축 분뇨 발생으로 농업용수, 토지 등 생산 환경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악취 발생, 지하수·하천 오염 등 일반 국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줌. 소비단계에서는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외부화가 확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 문제가 심각함. 음식물 쓰레기는 대량유통 및 대량소비, 포장식품의 이용 증가로 인한 포장재 폐기 발생도 동반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과 함께 이를 처리하기 위한 막대한 국가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
- 과거에 비해 화학비료 사용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업부문의 화학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또한 농약 사용량의 감소도 정체되고 있음.
-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및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축산 악취관련 민원이 2014년 2,838건에서 2016년 6,39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2016년

10월 기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사(11만 5천 농가) 중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허가 축사가 52%임.

- 음식물 폐기량은 가정에서는 물론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 소비단계는 물론 유통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 음식물 폐기량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지는 못함.
- 푸드 마일리지는 먹거리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치임. 우리나라는 국가별 1인당 푸드 마일리지가 2007년까지는 일본보다 작았으나, 2010년에 일본 푸드 마일리지 수준을 넘었으며 영국, 프랑스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 먹거리 관련한 문제를 노출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나라가 수입 등 원거리 이동을 통한 먹거리 공급이 많으며, 즉 식량안보 수준이 높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2.5.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 지속

- 국가적 식품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 확대, 기후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신종 위해물질 출현과 국가·지역 간 전파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식품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이 증가함. 연이은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쉽사리 해소되고 있지 못함.
- 시장개방 확대로 식품 수입이 증가하고, 최근 소비자 해외 직접 구매가 식품으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 식품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사고가 다양화하고 글로벌화할 우려도 증대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신·변종 병원성 미생물 등이 지속적으로 출현·확산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의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 항생제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유전자변형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여전하며, 나노기술, 유전자가 위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 상용화가 예상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과학적인 대응과 함께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됨.

2.6. 농업·농촌 및 먹거리 관련 인식 정체

- 농업·농촌 및 먹거리에 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은 국내 먹거리 생산기반 유지의 원동력이 되며, 정부의 원활한 농정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그러나 우리 농업·농촌 및 농식품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 전반의 긍정적인 인식이 비교적 높은 편임. 그러나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할 경우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당사자인 농업인의 인식이 도시민에 비해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도시 대비 낮은 편이라는 의견이 높은 편이었음. 도시민의 51.7%, 농업인의 78.8%가 농촌의 생활수준을 도시 생활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비중은 2017년에 70%로 높은 수준인 반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7.9%에 불과하며(관심도),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가 자신과 관계가 있다고 생

각하는 비중도 32.6%에 불과하였음. 국민들의 농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와 국내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7.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미흡

- 농식품 산업은 국민의 기본적인 먹거리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 산업인 동시에 세계 시장 성장성, 고부가가치 창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유함.
- 2015년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210조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68조 (2015년 기준) 중 식품·외식산업에 43.4%가 투입되는 등 국산 농산물의 중요한 소비기반임.
- 그러나 국내 식품·외식산업은 사업체 중 5인 미만의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 (86.1%)하는 영세한 구조이며, 생산성을 나타내는 사업체당 매출액,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타 산업 대비 낮고, 영업이익률도 낮아 수익성이 저조한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지는 못함.
- 농업의 경우에도 농업 부문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 인력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 인력 양성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미래 농업을 책임질 20~30대 농업 인력 비중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업 부문 미래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2.8. 지역 사회·공동체 붕괴 위기

-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경제사회적 불균형 확대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 농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공동체가 증가하고 있음. 지역사회·공동체 붕괴는 사회갈등을 유발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할 수 있음.

3.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기존 농식품 정책은 경제·환경·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농식품 관련 이슈·문제를 일부 영역에 초점을 두고 개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그러나 먹거리 관련한 문제·이슈가 농식품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푸드시스템 전 영역에 걸쳐서 발생되고 있으며, 농식품 관련한 환경·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부문별·영역별로 추진되는 제한적 정책을 통해서도 충분한 정책성과를 달성하는데 한계에 도달함. 또한 기존의 생산 또는 산업적 관점과 경제 성장·발전에 초점을 맞춘 문제 해결 방식은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또는 환경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함.
- 최근 지속가능성이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고려 가치로 등장하면서 먹거리 분야에서 경제·사회·환경 간에 균형을 이룸으로써 푸드시스템 전반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두고 보다 포괄적인 정책대상·영역 또는 범위를 상정하고 농식품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첫째, 농식품 관련한 이슈·문제의 복잡성·다양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면서 정부 정책 간 연계·통합에 의해 먹거리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산업발전에 초점을 맞춘 성장 우선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부 경제 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농식품 정책에서도 복지·분배, 고용 등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환경·생태영역을 중심으로 적용되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또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미래를 고려한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개념으로서 확장됨. 이에 따라 푸드시스템 또는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먹거리 정책의 추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를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제 3 장

국내 먹거리 정책 현황과 추진 실태

1. 추진 실태

1.1. 추진 체계

1.1.1. 조직 구성

- 정부 먹거리 정책은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제기되는 식품수급(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식품산업, 환경·폐기,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음. 이들 먹거리 정책은 취급단계 및 영역별로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별로 수립·추진함. 정부는 이밖에 국가 먹거리 정책의 수립·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가. 중앙행정기관

- 먹거리 정책은 소관업무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분산하여 수립·추진됨. 이들 기관은 품목별·영역별로 구분하여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수립·추진함.

나. 정부위원회

- 농식품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정부위원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이들 위원회는 소속기관 유형별로 ① 대통령 또는 ②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거나 ③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구분됨.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먹거리 관련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는 대표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이 있음. 이중 ‘식품안전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범정부 식품안전추진체계의 구축을 통해 식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먹거리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다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먹거리 관련 사항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 농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부처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들 위원회는 주관기관 이외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을 소속으로 하여 개별적(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가 기관별 소관업무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음.

1.1.2. 법률 체계

- 농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법의 목적, 관리 대상 등에 따라 소관 업무별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의 법률은 비교적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영양관리법”은 영양 측면에서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등은 농식품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거나 복지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이밖에 산림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별로 농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들이 분산되어 있음.

-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농식품 관련 법령들은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구성됨. 농식품 관련 기본법들은 국가 정책 방향 제시와 제도·정책의 체계화 등을 위해 제정되어 관련 일반법에 대한 상위법으로서의 역할을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해양수산부)은 어촌 및 수산업, “산림기본법”(산림청)은 산림 및 임업 등에 관한 일반법들의 상위법임.
 - 이밖에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품안전, “사회보장기본법”(보건복지부)은 사회보장,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이상 환경부)은 자원순환과 환경정책,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은 소비자 권익,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국무조정실)은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상위법으로서 기능을 함.

1.1.3.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주요 먹거리 정책 추진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법정계획들은 추진목적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취급단계별로 농식품 수급, 안전, 건강·영양 등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먹거리 정책·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주로 소비 단계 건강·영양, 환경부는 폐기·순환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단계 안전·품질 문제를 다루고 있음.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푸드시스템 전 단계를 정책 추진 범위로 하여 농식품 수급, 안전·품질은 물론 건강·영양,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포괄적·종합적 성격의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독립적인 소관기관으로 하여 수립·추진됨.

2. 주요 먹거리 계획 부문별 추진 내용

- 이 절에서는 먹거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먹거리 관련 법정계획들의 추진 목표 및 비전을 살펴보고, 농식품 정책 영역별로 법정계획의 세부 추진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를 검토함.
 - 정책영역은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환경·폐기, 식품산업, 지역·공동체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함.

2.1. 정책 비전 및 목표

- 최근 다수의 먹거리 관련한 정부계획은 비전 및 목표를 통해 먹거리 정책이 소비·소비자(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가능성, 행복 등을 강조함.
 - 예컨대 기존에 농업·생산 및 산업 관점의 정책이 주를 이루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계획의 경우 최근 ‘식품산업진흥계획’을 제외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소비, 국민, 지속가능, 건강, 안심, ‘식생활 교육기본계획’ 국민, 삶의 질,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은 소비자, 상생 등을 목표·비전에서 제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과 어린이의 안전, 건강, 행복 등, 보건복지부는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서 국민, 영양, 건강 등을 강조함. 환경부는 환경적 관점에서 행복, 지속가능 또는 다른 부문과의 조화 등을 제시함.

2.2. 영역별 정책·사업

2.2.1. 식품수급(식량안보)

- 생산 기반, 수급, 식량자급률 등 식품수급 및 국가 식량안보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사업은 농축수산식품 생산·수급에 관한 업무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추진됨.
- 이들 부처의 식량안보 관련 정책·사업을 담고 있는 주요 정부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이하 ‘수산업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소관) 등이 대표적임. 이밖에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가능계획’(이하 ‘지속가능계획’)은 국

가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농식품 정책·사업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가. 주요 정책·사업

- 식품수급 및 식량안보 관련 정책·사업은 주로 생산기반 조성, 수급 안정성 확보, 식량자급률 제고 등과 관련이 있음.
 - 생산기반 관련하여 농업에 관한 정책·사업은 농지 확보, 밭작물 생산, 축산업은 종축개량, 수산업은 수산자원 보전·조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하고 있음.
 - 수급안정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체계 등 가격 안정 장치 마련, 경영위험관리, 유통체계 정비 등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제시됨.
 - 식량자급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업의 경우 농발계획은 쌀 관련 정책·사업들이 포함되며, 수산물의 경우 수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등의 생산능력을 확대시키는 정책·사업들이 제시됨.

나. 주요 지표

- 생산기반과 관련하여 농발계획은 식량자급률을 생산기반 조성의 적정성(성과)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며, 이밖에 수리안전답률, 배수개선율, 직불제개편유무 등이 관련이 있음. 수산업기본계획의 경우 수산자원량·생산량, 바다숲 조성, TAC, ITQ제도 도입 등 세부 사업 관련한 비교적 다양한 지표를 제시함. ‘지속가능기본계획’은 농업분야는 농지면적, 수리안전답, 수산업분야는 수산자원량·어업량 등을 생산기반 관련한 지표로 제시함.
- 수급안정 관련하여 농발계획은 채소가격안정제, 기초생산자 조직,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비중, 정가수의매매 거래 비중 등 관련 정책·사업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표들을 성과지표로 제시함. ‘수산업기본계획’은 비축품목 및 물량을 수급안정 관련 지표로 제시함.

- 식량자급률의 경우 대부분의 정부계획들이 공통적으로 성과지표로 제시함. 이밖에 농발계획은 직불제 개편, 벼 재배면적 등 세부 정책·사업 관련된 지표들을 성과지표로 제시함.

2.2.2. 식품안전·품질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농식품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함. 이밖에 먹는 물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함.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안전관리기본계획’),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이하 ‘수산업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환경계획’), ‘지속가능발전계획’(이하 ‘지속가능계획’)(이상 환경부 소관)이 식품안전 관련한 주요 정책·사업들을 담고 있음.

가. 주요 정책·사업

- 식품안전·품질 관련 정책·사업은 생산과 유통·소비단계 농수축산식품안전관리, 농식품인증표시, 소비자 참여·소통 강화(정보 제공) 등과 관련이 있음. 이밖에 환경부 먹거리 계획은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의 경우 위해성 평가, PLS 등 잔류물질 관리, GAP·HACCP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함. 축산물의 경우 사육환경 개선,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가 주된 정책·사업이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PLS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수산물은 생산환경 개선, PLS 도입 등을 통한 잔류물질 관리, 양식장 HACCP 확대가 주된 정책·사업임.

-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는 축산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식품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식중독 예방 및 대응, 집단급식소 안전 관리, 유통 단계 잔류물질 관리, 위해식품 차단, 유통시설 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제시함.
- 농식품 인증·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 GMO 등 주요 농식품 인증·표시 개선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 이밖에 소비자 참여·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발계획과 수산업기본계획은 이력제 확대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품안전계획은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과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을 포함함.
- 먹는 물 관리를 위해 환경계획과 지속가능계획에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지하수, 상수원 오염원 관리 및 수질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나. 주요 지표

- 생산단계 주요 지표는 농약 관련한 지표가 주를 이루며(농약 등록수(품목), 판매기록 관리대상, 사용량, 적발률, 농약 분석기술 등), 이밖에 검사계획 또는 검사율, 적합률, 기준·규격 재평가(종), 화학비료 사용량, 가축전염병 발생률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유통·소비단계 지표는 유통단계 검사 및 위해차단 장치 마련(검사소 설치율, 차단시스템 적용 매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지원율), 위해 발생 규모(식중독 환자수), 안전 확보에 대한 인식(학교주변 식품안전 체감도) 등을 포함함.
- 농식품 인증표시는 GAP, HACCP 등 인증·표시 인증률(인증규모) 또는 이행률 등을 주로 지표로 활용함. 원산지의 경우 표시 이행률과 함께 표시대상 품목(음식점 원산지 표시)을 지표로 활용하기도 함.

- 소비자 참여·소통 강화에 관한 지표는 이력추적(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 이력제 품목)과 위해정보 조치율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됨.
- 먹는 물 관리 지표는 상수도 보급률, 물 공급 안정지수 등 깨끗한 물 공급에 관한 사항, 깨끗한 물 확보 수준, 고도정수처리 시설 비율, 감시물질 지정 항목, 수질오염지표 수 등 수질 및 오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2.2.3. 건강·영양

- 식생활교육, 건강·영양 관리·지원, 공공급식 등 건강·영양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건강·영양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담고 있는 주요 정부계획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하 ‘식생활기본계획’)(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영양관리기본계획’(보건복지부 소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식품안전계획’),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어린이안전종합계획)(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지속가능발전계획’(‘지속가능계획’, 환경부 소관) 등이 있음.

가. 주요 정책·사업

- 건강·영양 관련하여 식생활교육, 영양·건강 관리, 건강·영양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구축,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사업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음.
 - 식생활교육에 관한 정책·사업은 지속가능계획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이들 계획은 어린이 대상 식생활교육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밖에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전반에 대한 식생활교육이 제시되고 있음.

- 국민 영양·건강관리는 학교 과일간식지원 등 식품지원, 나트륨, 당류 등 건강 위해요소 감소, 기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영양·건강 관리 및 이러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반 강화에 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정보제공은 건강·영양 관련한 홍보·정보를 제공하거나 확대·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제시함.
-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구축의 경우 농식품 바우처, 영양플러스사업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밖에 노인 취약계층 영양관리, 저소득층 아동 과일 제공, 다문화 가정 영양관리 등이 제시되고 있음.
-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어린이안전종합계획), 국산 및 지역산 식재료 사용(농발계획), 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 영양관리(식품안전계획, 어린이 안전종합계획) 등과 관련된 사업·정책을 주로 포함함.

나. 주요 지표

- 식생활교육 관련하여 식생활 만족도가 대표적으로 식생활교육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 지표로 활용됨. 이밖에 ‘식생활교육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19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들 지표 이외에 아침밥 결식률,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실천률, 교육 수혜율 등도 식생활교육 관련 성과지표로 먹거리 관련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음.
- 영양·건강 관리 관련한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로는 지방, 나트륨, 당 등 특정 영양소 또는 과일·채소 등의 적정 섭취 인구 비율 또는 섭취량이 주로 활용됨. 이밖에 영양표시 이용 인구 비율, 아침 결식률 등도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공공급식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식품안전계획과 어린이안전종합계획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된 지표들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지원율, 센터 수 및 어린이 수혜율,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생 수 등이 활용됨.
- 정보제공 관련하여 칼로리 코디 앱을 통한 영양정보 제공 품목 수가 제시되고 있는 반면,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지표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19개 성과지표 중에서 홍보·정보·교류 부문의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 ‘농식품 인증표시 확인정도’,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초지식 갖고 있는 비중’은 정보 제공에 의한 궁극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분류할 수 있음.

2.2.4. 환경·폐기

- 농식품 분야 환경·폐기에 관한 정책·사업은 농식품 생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환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환경·폐기 관련 정책·사업들을 담고 있는 주요 정부계획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계획’(이상 환경부 소관) 등이 있음.

가. 주요 정책·사업

- 환경·폐기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환경친화농업,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생산환경관리,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 폐기·순환관리 등임.
- 환경친화농업은 친환경농업 및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제시되

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공익형 직불제 및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태양광발전, 소수력발전 및 풍력발전 시설 설립과 바이오에너지 원료 작물에 관한 사업을 포함함. 이밖에 지속가능발전계획은 산림분야 목재펠릿 수급·유통에 관한 정책·사업을 제시함.
- 생물다양성 확보는 생물다양성 유지·증진과 지표종·향토종 보전·관리가 주요 내용이며, 생산환경 관리는 축사, 농업환경 및 연안·해양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온실가스감축 관련하여 농화학비료 사용 절감, 가축분뇨 처리 강화, 농어업분야 화석연료 사용 축소,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됨.
- 기후변화 대응은 기상변화 예측 및 정보 제공(조기경보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농업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시설, 품종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하고 있음.
- 폐기·순환관리는 지역 농업환경자원 관리 및 에너지화(축산 분뇨), 음식물쓰레기 배출 저감 및 에너지화 등에 대한 정책·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함.

나. 주요 지표

- 환경친화농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하며, 신재생에너지는 농업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규모가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생산환경관리는 수질 및 연안 등 오염 및 관리 수준, 온실가스 감축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기후변화 대응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이 성과지표로 활용됨. 이밖에 농식품분야 폐기·순환 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지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율임.

2.2.5. 식품산업

-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사업은 농식품 생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주요 정부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식품산업진흥계획’(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이하 ‘수산업기본계획’)(해양수산부 소관) 등이 있음.

가. 주요 정책·사업

-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사업은 농축산업 및 식품산업 부문에서의 산업 경쟁력 강화, 취창업, 인력양성 등과 주로 관련이 있음.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은 농축산업은 시설 스마트화·첨단화, 식품산업은 국산 식재료 사용, 첨단기술 적용, 우수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주로 추진됨.
- 취창업은 농수축산업은 농지, 정착(안정)지원, 기술·경험 축적 기회 제공 등, 식품산업은 창업훈련 프로그램, 창업지원센터 활용(공간 제공) 등을 지원함. 인력육성은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청년 등 직업교육과 비농업인력, 여성인력, 다문화가정 인력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인력 유입 등을 포함함.

나. 주요 지표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성과지표는 주로 스마트 축사, 스마트 팜 조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취창업의 경우 취업자(종사자) 수, 청년 일자리 창출 수 등을 활용함. 인력육성은 교육인원이 주요 지표임.

2.2.6. 지역·공동체

- 농식품 분야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은 농식품 생산·공급 및 농어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주요 정부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직거래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있음.

가. 주요 정책·사업

- 지역·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지역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활성화, 6차산업, 지역농업공동체 육성, 전통식문화, 도농상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지역 푸드플랜(지역먹거리종합전략)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가 푸드플랜과 함께 농림축산식품에서 수행함.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매장 확대 지원, 학교급식 및 외식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 홍보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6차산업은 농어업·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를 의미하며, 경영지원, 주민(주체) 교육 등을 실시하며, 특화마을 조성을 추진함. 지역농업공동체 육성은 지역 사회적 농업 및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꾸러미 활성화 등을 포함함.
- 전통식문화 관련한 사업·정책은 농어업·농어촌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 있음. 농발계획은 전통식문화 우수성 확보, 수산업기본계획은 어촌 전통문화 계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이밖에 ‘식생활교육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식생활 교육적 관점에서 전통식문화 계승·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도농상생은 농업·농촌체험교육을 포함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활성화와 도시

농업 활성화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음.

나. 주요 지표

-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추진 정책·사업의 성과와 비교적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예컨대 지역 푸드플랜의 경우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수, 로컬푸드 활성화는 직거래 규모, 6차산업은 6차산업지구 수, 농촌관광객 수, 어가 소득 등을 지표로 활용함. 지역농업 공동체 육성의 경우 사회적농업 실천 농장 육성, 도농상생은 도시농업 참여자, 농어촌 체험과정 도입 학교 및 학생 수 등이 중 지표임.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경우 전통식문화 체험·실천율이 활용되며, 해당 지표는 설문조사(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지표임.

제 4 장

국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1. 먹거리 가치와 기존 정책 인식과 평가

- 일반국민의 경우 전반적으로 농업·농촌 정책 및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평균 3.44점, 5점 척도 기준) 보다는 일상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거리 정책 및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3.83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개별 국민에 대한 실제 영향도 농업·농촌 정책 및 관련 문제 보다는 먹거리 정책 및 관련 문제가 큰 것으로 인식하였음.
- 일반국민들은 농업·농촌 정책과 먹거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음. 다양한 먹거리 정책 이슈 중에서 식품안전성(52.6%)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후변화(26.0%), 농산물수급(14.6%), 로컬푸드(11.5%), 음식물쓰레기(식품낭비)(10.2%)순으로 비교적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향후에도 식품안전성(41.1%), 기후변화(31.8%)의 중요성이 특히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농산물수급(14.1%), 로컬푸드(10.3%)에 대한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평가함.
- 일반국민들은 정부 먹거리 정책의 가장 주요한 목적을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29.9%)인 것으로 평가함. 다음으로 고품질 안전·건강 먹거리 공급(16.2%), 농식품의 합리적 가격 유지(15.1%) 순으로 주요한 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2.91점, 5점 척도 기준), 특히 환경·폐기(2.59점) 관련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였음(3.81점, 5점 척도 기준). 특히 환경·폐기(2.59점) 관련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그룹별로 비교한 결과 정책 충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생산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2.85점, 5점 척도 기준), 정책 중요성은 전문가(4.20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함.
- 현재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다부처로 분산되어 먹거리 관련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2.65점, 5점 척도 기준). 조사대상 그룹별로 전문가들이 다부처 분산 먹거리 정책 수립·추진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1.80점, 5점 척도 기준)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산자(2.19점), 일반국민(2.65점) 순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음.
- 일반국민들은 기존의 먹거리 정책에서 소비자, 생산자, 식품산업적 관점이 다소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소비자, 생산자, 식품산업적 관점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에 대한 인식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94점, 5점 척도 기준). 조사대상 그룹별로 비교한 결과 전문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의 필요성을 보다 더 크게 평가하고 있었으며(4.29점, 5점 척도 기준), 다음으로 종합전략 수립·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생산자(4.17점), 소비자(3.94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관점으로 일반국민은 소비자 관점(57.5%)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하였으며, 생산자의 경우 생산자 관점(58.7%), 소비자 관점(33.3%) 순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응답함. 상당수의 전문가들의 경우 소비자 관점이라고 응답하였음(66.7%).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할 경우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세부 실천계획까지 제시하는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음(57.3%). 조사대상 그룹별로 비교한 결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정부 세부 실천계획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비중은 생산자(74.0%)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는 69.0%, 일반국민은 57.3%였음.
- 먹거리 관련한 주요한 가치들 중에서 일반국민들은 안전성(4.42점, 5점 척도 기준)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속가능성(4.10점), 충분성(4.03점)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 먹거리 관련한 주요한 가치들 중에서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안전성(4.42점, 5점 척도 기준)이 주요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밖에 지속가능성(4.10점), 충분성(4.30점) 등의 가치가 비교적 종합전략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그룹별로 검토한 결과, 생산자는 안전성(4.49점), 충분성(4.48점), 지속가능성(4.27점), 경제성(4.23점) 순으로 높게 평가함. 전문가들의 경우 안전성(4.46점), 지속가능성(4.36점), 충분성(4.26점), 접근성(4.18점), 이용성(4.06점) 순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음.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에서 제시된 비전인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비전으로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3.70점, 5점 척도 기준).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에서 제시된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등 4개 아젠다에 대해서도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음(3.83점, 5점 척도 기준).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에서 제시된 4개 아젠다 중에서 정책적 시급성은 건강한 먹거리(4.14점, 5점 척도 기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에서 제시된 4개 아젠다 중에서 정책적 중요성은 건강한 먹거리(4.14점, 5점 척도 기준)를 가장 높게 평가함.

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세부정책 평가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주요 먹거리 관련 정책 영역에 대해서 그간의 정책성과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일반국민들은 식량안보

(37.9%), 식품안전·품질(25.3%), 건강·영양(16.6%) 순으로 비교적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하였음.

- 주요 정책영역 중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포함하여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대체로 식품안전·품질(41.7%), 환경/폐기(20.9%), 식량안보(17.9%) 순으로 높게 평가함. 이밖에 조사대상 그룹별로 생산자는 식량안보(40.9%), 식품안전/품질(28.0%) 순, 전문가의 경우에도 생산자와 유사하게 식량안보(33.7%), 식품안전/품질(29.4%) 순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통해서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 주요 정책영역 중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미래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 영역으로는 일반국민들의 경우 식품안전/품질(31.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량안보(25.5%), 환경/폐기(20.7%) 순이었음. 조사대상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을 중요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생산자, 전문가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부정책이슈별로 분석한 결과, 기존의 정책성과가 미흡한 영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현재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 또는 미래 중장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영역으로 대체로 공통적으로 사전예방 농식품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소비,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참여 확대, 환경친화적 농업 추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 그룹별로 현재 시급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정책이슈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사전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14.2%),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참여 확대(11.5%),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소비(11.3%), 생산자는 농식품 생산·공급기반 구축(14.0%), 국민

건강·영양관리(13.7%),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참여 확대(12.5%), 전문가는 농식품 생산·공급기반 구축(13.5%), 사전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13.0%), 공공급식 체계 구축(11.2%)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일반국민은 환경친화적 농업(10.9%), 사전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10.2%), 생산자는 농식품 생산기반 구축(13.0%),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참여 확대(12.2%), 국민건강영양관리(11.9%), 사전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11.1%), 전문가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확립(14.5%), 농식품 생산·공급기반 구축(14.5%)이 중요하다고 평가함.

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역량 평가

- 일반 국민들은 기존 먹거리 정책에서 상향식 의사결정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인식이 높지는 않았음(3.03점, 5점 척도 기준). 반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상향식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음(3.57점, 5점 척도 기준). 조사대상 그룹별로는 생산자(2.53점)와 전문가들(2.55점)이 특히 기존 정책에서 상향식 의사결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으며,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서 상향식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생산자(4.12점), 전문가(4.25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먹거리 가치와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역량 등이 중요함. 일반국민들은 먹거리 관련한 가치와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농촌(3.55점, 5점 척도 기준), 민간단체(3.50점), 지역주민(3.30점) 순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함.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은 대체로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함. 그러나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민간단체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함(3.20점, 5점 척도 기준). 조사대상 그룹별로는 공통적으로 민간단체, 농촌 지역이 대체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국가 먹거리 전략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동반되는 역량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음.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먹거리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히 생산자단체(4.18점, 5점 척도 기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였음.

제 5 장

해외 주요국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현황

- 해외 주요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정책 과제·사업은 먹거리 관련 주요 정책 영역(이슈)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식량안보와 관련된 정책 과제·사업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호주, 영국은 자국 내 식량안보 확보 보다는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확보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해외 주요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주요 범위〉

국가	식량안보 (식품수급)	식품안전·품질	건강·영양	환경/폐기	식품산업	지역·공동체
프랑스		●	●	●	●	●
호주	●	●	●	●	●	
영국	●	●	●	●	●	●

자료: 연구진 작성.

- 해외 주요국의 먹거리 전략이 대체로 먹거리 관련 전반적인 정책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반면, 세부적으로는 국가별 여건·현황에 따라 포함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 내용, 대상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예컨대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먹거리 전략은 건강·영양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접근성 개선이 주요하게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급식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음.

- 또한 식품안전·품질에 대한 내용도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음.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양질의 식품 공급을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시스템 구축, 영국은 공공 신뢰, 표시 정비 등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 이밖에 환경·폐기 관련하여 프랑스, 호주 등이 농식품(음식물) 폐기(낭비)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기후 관련된 사안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먹거리 전략이 대체로 국내 문제·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호주의 경우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식량 수출국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다른 국가와는 달리 수출(무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음. 영국의 먹거리 전략도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이밖에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는 지역단위 먹거리 관련한 이슈·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지역 먹거리 이용과 가치 확산, 영국은 지역 먹거리 이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해외 주요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영역별 세부 과제〉

국가	프랑스	호주	영국
식량안보 (식품수급)		· 식량안보(개발도상국)	· 공급체인 개선 ·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개발도상국)
식품안전 · 품질	· 사회정의(양질의 식품 접근 가능성 확보)	· 외래해충 및 질병 대응 시스템 유지 ·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개선	· 식품안전성 공공 신뢰 구축 · 식품표시 규정 정립
건강·영양	· 사회정의(취약계층 식품지원, 형무소 식품공급 개선, 병원 및 노인요양원 등 단체급식 참여 공공 관계자 관심 제고) · 청소년 식생활교육(온라인 교육 및 교육 방법 자료 센터 구축, 가이드 전국 배치, 세계 식문화 교육)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 · 식품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 (어린이) 식품 생산에 대한 이해 증진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 · 식품섭취 정보 및 조언 제공 · 식인성질별 추세 전환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섭취 실천 · 농식품 생산과정 이해 증진 · 식품준비기술 향상 · 공공부문 식품 조달(소규모 지역 업체, 사회적 기업)

국가	프랑스	호주	영국
환경/ 폐기	· 식품 낭비 대응(캠페인, 폐기제품 재활용 촉진)	· 지속가능한 식품생산 기반 조성 · 지속가능성 환경에 대한 이해 제고 · 농업 온실가스배출 지원 ·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음식물 쓰레기 감소 (포장재 폐기 감소)	· 기후변화 대응(위험·위험요인 식별) · 환경에 적합한 식품 생산 보상(표창) 실시 · 바이오연료(에너지) 생산(식량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 · 생산 지속가능성 향상 · 농작업 개선(온실가스 등 환경) · 소비자 환경(기후 영향) 정보 제공 및 기후친화적 제품 공급 소매업체 인센티브 제공 · 공급체인(식품산업) 저탄소화(탄소 배출량 저감) 격려·지원 · 양식장 및 해양 환경 관리 · 지속가능한 농업·토지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 생태계 가치 평가
식품산업	· 청소년 식생활교육(식품 분야 직업 훈련 실시, 관련 정보 제공 등)	· 수출(무역) 증진 · 산업인력 진입 지원 · 산업 시장경쟁력 및 효율성 촉진 ·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통한 식품불안 정성 감소	· 농식품 경쟁력·효율성 향상 · 규제 부담 완화 · 수입과 리스크를 공정하게 분배한 공급체인 수립
지역· 공동체	· 지역 먹거리 유산(지역 식품 프로젝트 개발, 단체급식 근거리 농식품 공급, 원산지 표시)		· 지역 작물재배 토지 확보 · 전통·지역 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주: 국가별 먹거리 종합전략에 포함된 주요 과제·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함.

자료: 연구진 작성.

제 6 장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과 전략

1. 수립 방향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비전으로 하며 ‘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등 4개 아젠다로 구성됨.
 - 관련 TF 등을 거쳐서 2018년 4월에 발표된 종합전략(안)을 바탕으로 4개 아젠다를 발굴함.
 - 세부 추진과제는 농식품 생산부터 소비·폐기단계 까지를 포괄하며, 이들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급·안보, 건강·영양, 안전, 환경, 산업, 지역·공동체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정책·사업을 포함함.
- ‘건강한 먹거리’는 안전하며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강·영양 수준을 제고하며,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추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정책과제들은 ① 안전 먹거리 소비망 구축 ②

국민 건강·영양 지원 ③ 바른 식생활실천 제고 등으로 분류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 건강·영양, 식생활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포함함.

-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를 통해서 생산기반 조성과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요 정책과제들은 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②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③ 먹거리 공공성 강화 등 3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생산·수급, 식품지원, 공공급식 등의 정책·사업 등을 포함함.
- ‘생태친화적 먹거리’에서는 생산부터 소비·폐기 단계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①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 ②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③ 먹거리자원 순환기반 조성 등 3개 영역에 환경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포함함.
- ‘더불어 사는 먹거리’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성장의 한 축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산업적, 경제적, 문화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과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① 먹거리 경제 순환체계 확립 ② 먹거리 산업 성장동력 구축 ③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 등으로 구분하며, 먹거리 분야 관련한 지역 경제·산업, 식문화 등 먹거리 관련한 인식·가치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포함함.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비전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		
중점 추진 과제	건강한 먹거리	안전 먹거리 소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제도 강화 • 유해물질 체계적 관리 강화 • 먹거리 안전·위생 소비 환경 조성 • 먹거리 안전 정보 제공 확대
		국민 건강 영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기 어린이·청소년 건강·영양지원 확대 • 건강·영양 정보 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 국민 건강·영양 먹거리 선택권 제고
		바른 식생활 실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식생활교육 활성화 •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식생활교육 콘텐츠 발굴 및 추진체계 확립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 농지관리 강화 및 간척지 활용 다양화 • 수급 조절기능 강화와 예측 고도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식품접근성 개선과 영양불균형 완화
		먹거리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모델 구축·확산 •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제고 및 관리 강화
	생태 친화적 먹거리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인증 먹거리 생산·소비 확대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확산 •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확대·개편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 • 기후변화 대응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 농수축산업 생산·사육 환경 관리
		먹거리자원 순환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과 자원화 추진
	더불어 사는 먹거리	먹거리 경제 순환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푸드플랜 확산 • 지역 먹거리 경제체 육성 • 식품·외식기업 성장과 농가소득 연계 •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먹거리 산업 성장동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산업 경쟁력 강화 • 먹거리 분야 창업 지원 • 먹거리 분야 미래인력 육성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 자생력 강화 • 도농교류와 체험·교육 활성화 • 한국 식문화 인식 제고
추진 체계	참여·협력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거버넌스 조직 ▪ 법률 근거 마련

2. 세부 추진전략

2.1. 건강한 먹거리

2.1.1.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소득 증가, 고령화, 여성 사회진출 확대 등 경제사회 및 인구학적 변화와 함께 소비자의 질적 소비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식품안전, 건강·영양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함.
- 식품수입 증가, 기후변화, 과학·기술발전, 식품소비 외부화 경향 확대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 사건·사고가 지속되며 소비자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정부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짐. 또한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정보 과잉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먹거리 관련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국가의 전반적 경제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층별·영양소별로 영양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먹거리에 기인한 질병 발생이 증가함. 반면 아침식사 결식률, 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는 등 불규칙·불건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의 비중이 증가함.

2.1.2. 추진 과제

아젠다	건강한 먹거리		
추진 과제	안전 먹거리 소비망 구축 •사전에방적 안전관리제도 강화 •유해물질 체계적 관리 •안전·위생 소비환경 조성 •안전정보 제공 확대	국민 건강·영양 지원 •어린이·청소년 건강·영양지원 확대 •건강·영양 정보 기반 구축 및 제공 활성화 •소비자 건강·영양 먹거리 선택권 제고	바른 식생활실천 제고 •어린이·청소년 식생활교육 활성화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생활교육 추진 기반 확립

가. 안전 먹거리 소비망 구축

<p>■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방적·체계적 안전관리, 안전·위생 먹거리 소비 환경 조성, 소비자 먹거리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제고 <p>■ 성과지표</p> <p>[정량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인증 농가 확대 - HACCP 인증(등록) 확대 - 식중독 환자수 감소(명/십만명) - 원산지 표시 이행률 향상 - 깨끗한 물 확보 수준(수질등급달성) 향상 <p>[정성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정책 신뢰 수준 향상
--

① GAP, HACCP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제도 강화

- 농산물 품목별 GAP 인증 확대,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GAP 활성화
 - 규모 있는 단지 중심으로 지원 확대,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 공공급식 등 대량수요처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 소비자 인지도 제고 홍보·교육 확대
- 축산물 HACCP 적용 대상 확대와 인증 사후관리 강화
 - 축산농장 HACCP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과 지원 확대
- 수산물 HACCP 적용 품목 확대와 인증 사후관리 강화
 - 기존 어류에 갑각류, 패류 등 양식장 HACCP 적용 품목 확대
 - 수산물 HACCP 양식장 등록 컨설팅 지원 및 제도 홍보 강화

② 유해물질 체계적 관리 강화

- 농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도입과 단계적 확대, 체계적·안정적 현장 시행 지원
 - 사용가능 농약 등록 확대, 농약 관리 강화 및 제도 이해도 제고
 - 축·수산물 농약·동물용의약품 PLS 단계적 도입 확대

③ 먹거리 안전·위생 소비 환경 조성

- 수질관리 취약시설·계층 등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먹는 물 안전성 확보
 -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관리 취약시설 관리실태 합동점검 등 실시, 전문가 기술지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지침 마련·배포
- 유통·소비단계 농식품 위생관리 및 식중독 사전예방 체계 확립
 - 식품제조업체 및 집단급식소 등 지하수 사용 시설 및 농업용수 사용 시설 재배 농산물 등 노로바이러스 관리
 - 수산물 위해요소 집중 관리
 - 학교 급식시설 정기적 위생 점검과 고위험군 학교 집중 관리
 - 먹거리 안전·안심 환경 조성과 자율적 실천 위한 위생·안전 교육·홍보 강화

④ 먹거리 안전 정보 제공 확대

- 농수축산물 이력제 참여 대상 및 품목 확대
 - 생산단계 이력관리 농가 확대 및 축산물 이력관리 품목 확대

- 농식품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및 관리 강화
 - 소비자 관심 대상 및 위생·안전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표시 대상품목 확대
 -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관리 강화
-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GMO 안전관리 추진
 - GMO 국경검사 및 유통단계 모니터링 강화, 민관 협의체를 통한 표시제 개선 논의와 온오프라인 소통 활성화로 정부 GMO 안전관리 신뢰 제고

나. 국민 건강·영양 지원

■ 추진방향

- 성장기 어린이·청소년 건강·영양 지원, 국민 건강·영양 서비스 이용 활성화, 건강·영양 먹거리 선택권 제고를 통한 국민 건강·영양 수준 개선과 건강한 삶 영위 보장

■ 성과지표

[정량지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및 어린이 수혜율 확대
- 어린이·청소년 비만 유병률
- 건강·영양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교 확대
- 영양표시 대상 품목·업종 확대
- 적정 수준 영양소(당, 지방, 나트륨) 섭취 인구 증가

① 성장기 어린이·청소년 건강·영양 지원 확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영양관리 체계화와 지원 확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개선·적용
- 학교 어린이·청소년 건강·영양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대상 확대
 - 초등학생 비만예방 프로그램, 초중고등학생 식품지원 프로그램 등 건강·영양 지원 프로그램 확대

② 건강·영양 정보 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 건강·영양 관련 정보 연계·통합과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
 - 부처별 건강·영양 관련 정보 연계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 활성화를 통한 건강·영양 관리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과 정보 활용도 제고
- 건강·영양 가이드라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상담 활성화
 - 비만·만성질환자, 임산부 고위험군 등 건강·영양 교육·상담 실시
 - 건강·영양 실천 매뉴얼 개발·보급, 비만인 집중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영양플러스 사업 모바일 교육 프로그램 전국 확대
 - 음주, 비만 예방을 위한 미디어·광고 가이드라인 개발,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 국민 건강·영양 먹거리 선택권 제고

- 영양 및 알레르기 표시 대상 품목 및 업종 확대
 -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 확대
 - 알레르기 의무표시 대상 식품 확대
 - 가공식품 중 당류 저감 지침 개발·보급과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음식점 확대

다. 바른 식생활 실천 제고

■ **추진방향**

- 국민 생활교육 강화와 식생활교육 추진 기반 확립을 통해 국민 식습관·식생활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실천 능력을 강화하며,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해 제고

■ **성과지표**

[정량지표]

- 학교·유치원 등 텃밭가꾸기 확대
- 식생활 교육 및 체험 비율 확대
- 전국 시·군·구 민간 지역협의체 증가

[정성지표]

- 국민 식생활 만족도 증가

① 어린이·청소년 식생활교육 활성화

-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관련한 인식·이해 제고를 위한 식생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보육·교육시설(어린이집·학교 등), 학교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청소년 식생활교육 실시
 - 도농교류 프로그램(농어촌체험과정), 텃밭가꾸기, 전통식문화 체험 등 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다양한 먹거리 관련한 체험기회 제공 확대

②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독거노인, 남성, 미혼여성, 군대 등 계층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실시
 - 식생활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관심이 낮은 인구집단 대상(독거노인, 남성, 미혼여성, 군대 등) 세대별 식생활교육 실시
 -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및 건강 교육 실시
 - 건강·영양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식생활교육·상담 실시

③ 식생활교육 콘텐츠 발굴 및 추진 체계 확립

- 교육 콘텐츠 발굴 및 DB 구축, 교육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농업·농촌, 환경, 전통식문화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 계층별·연령대별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식생활교육 교재·교구 개발
 - 식생활교육 관련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
- 식생활교육 전문적·체계적 추진 체계 확립
 - 시·도별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DB 구축,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식생활교육기관 및 체험공간 지정·확대, 시·도 및 시·군·구 민간추진단체 결성 전국적으로 확대

2.2.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2.2.1. 배경 및 필요성

- 국제 곡물시장 변동성 확대, 무역자유화에 따른 먹거리 수입 증가, 식품 소비 구조 변화 등 먹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국내 먹거리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먹거리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음.
-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있으며 기초 먹거리의 안정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함.
- 먹거리 안정적 공급과 먹거리 보장 국민의 생존과 기초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고령인구 급증, 여성가구주 가구 및 단독가구 증가 등 급속한 가구구조 변화와 함께 먹거리 취약계층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

2.2.2. 추진 과제

아젠다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추진 과제	<p>안정적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안정과 자급률 제고 •농지관리 강화 및 간척지 활용 다양화 •수급 조절기능 강화와 예측 고도화 	<p>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지원 확대 •취약계층 식품접근성 개선과 영양불균형 완화 	<p>먹거리 공공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모델 구축 •급식 식재료 품질 제고 및 관리 강화

가. 안정적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쌀 수급 안정과 주요 식량자급률 제고, 농지관리 강화 및 간척지 활용 다양화, 먹거리 수급 조절기능 강화와 예측 고도화를 통해 농어업 경영 안정과 먹거리 수급불균형 해소 및 먹거리 안정적 소비 보장

■ 성과지표

[정량지표]

- 식량자급률(식량/곡물/수산물) 제고
- 계약재배 면적 및 물량
- 채소가격안정제 도입 확대
-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비중 확대

① 쌀 수급 안정과 주요 식량자급률 제고

- 쌀 적정 생산 유도과 식생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쌀 수요 충족 지원
 - 쌀 생산조정제 실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
 - 간척지·일반농지 대상 논·밭 전환이 가능한 범용농지 조성 확대
 - 쌀 품질 제고와 소비 패턴 변화를 고려한 쌀 수요 확대 지원
- 쌀 이외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과 수요·판로 확충
 -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과 생산성 향상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시장교섭력 확보, 지역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② 농지 관리 강화 및 간척지 활용 다양화

- 농지 관리 강화와 효율적 이용 추진
 - 농지전용 허가(협의) 심사기준 엄격 적용, 진흥지역 정비기준 및 절차 개선,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지역 상시정비 시스템 구축 등
 - 신규 취득 3년 이내 모든 농지와 부채지주 소유 농지 등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태양광 설비는 기 허용지역(진흥구역 외)을 활용하며, 영농이 곤란한 염해

간척농지는 일시사용기간 확대

□ 간척지 농어업적 활용 방안 마련 및 추진

- 간척지 시설농업 및 원예 농업기반 구현과 SMART 양식 클러스터 구축

③ 수급 조절기능 강화와 예측 고도화

□ 품목별 가격안정장치와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채소가격안정제, 수입보장보험 등 품목별 가격안정장치 강화
- 주요 채소류 품목별 수급 조절 거버넌스 구축
- 축산물 축종별 축산자조금, 수급조절협의회, 수급조절적립금(돼지) 확대 등 자율적 수급관리 강화
- 양식생산 기반 및 기술 지원을 통한 수산물 생산 안정화

□ 관측 정확도 제고와 수급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농산물 관측 정확도 제고와 정보 적기 제공
-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 구축·운영

나.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추진방향

-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지원 확대, 취약계층 식품접근성 개선과 계층 간 영양불균형 완화를 통해 국민의 기초적인 먹거리 수요 충족과 삶의 질 개선

■ 성과지표

[정량지표]

-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 수혜율 확대
 - 학교 과일간식, 우유급식, 결식아동 급식서비스, 농식품바우처, 영양플러스 등 주요 식품지원 프로그램

①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지원 확대

□ 어린이·청소년 식품지원 프로그램 및 수혜 대상 확대

-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확대와 학교 우유급식 대상 및 범위 확대
- 결식아동 급식 서비스 다양화 및 지원 확대

② 취약계층 식품접근성 개선과 영양불균형 완화

- 농식품 바우처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식품지원프로그램 확대
 -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 농식품 구입 능력 개선
 - 저소득층 영유아·임산부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다. 먹거리 공공성 강화

■ 추진방향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모델 구축 및 확산,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제고 및 관리 강화 등 국민 식생활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등 국민의 먹거리 불안정성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

■ 성과지표

[정량지표]

- 공공급식 지역 식재료 이용 비중 확대
- 공공급식 지역 농가 참여 확대
- 공공급식 식중독 등 안전·위생 위반 사례 감소

①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모델 구축 및 확산

- 공공기관 및 군 급식 지역 연계 선도모델 구축
- 혁신도시, 접경지역 등으로 공공급식 지역 연계 모델 단계적 확산

②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제고 및 관리 강화

-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 마련과 체계적 관리
 -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 마련
 - 공공급식 식재료 일관 관리·공급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제고와 체계적 안전·위생 관리
 - 학교급식에 양질의 지역 농식품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 학교급식 안전·위생 관리 체계화

2.3. 생태친화적 먹거리

2.3.1. 배경 및 필요성

- 인구 증가에 따른 먹거리 대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고투입 영농과 대규모 집단축산에 의한 가축 분뇨 발생으로 먹거리 생산 환경이 영향을 받으며, 악취 발생, 지하수·하천 오염 등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삶의 질도 저하시키게 됨.
-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구조 전환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증가하며, 국민 소득 증가, 인구 증가, 교통 및 유통망 발달, 소비패턴 변화와 먹거리 교역 범위와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장거리 먹거리 유통 확대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먹거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소비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2.3.2. 추진 과제

아젠다	생태친화적 먹거리		
추진 과제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먹거리자원 순환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확산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확대·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지원 확대 •취약계층 식품접근성 개선과 영양불균형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 생산·소비 체계 구축 •농축산업 생산·사육 환경 관리

가.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친환경 인증 먹거리 생산·소비 확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확산,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먹거리 생산 환경 개선과 농축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 성과지표

[정량지표]

- 친환경 인증 생산 실적 증가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지역 확대

① 친환경 인증 먹거리 생산·소비 확대

- 친환경 먹거리 생산 확대 및 인증제 개편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규모화·조직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 개선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

②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단계적·전국적 확산
 - 종합적 환경개선 추진을 위한 활동별 효과성 검증과 이행점검 체계 구축
 - 사업 도입과 시·도별 관리체계 구축 후 전국적으로 단계별 확산 추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친환경농축산업 인증 연계 추진

③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확대·개편

-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요구 부응하여 쌀 중심 직불체계 공익형으로 개편
 -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 환경보전 등 준수 의무 부과와 지원 확대
 - 세부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
 - 직불제 조기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 타작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및 수요처 발굴로 쌀 재배 농가 작목전환 지원

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 추진방향

-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 기후변화 대응한 농식품 생산·소비 체계 구축, 농축수산업 생산·사육 환경 적정관리로 오염부하 최소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정량지표]

- 기후대응 작물 개발 확대
- 농업지역 에너지 절감시설(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①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

- 농어업분야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 시설원에 분야 중심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
- 농사와 태양광발전병행사업과 양식장태양광발전사업 추진

② 기후변화 대응한 농식품 생산·소비 체계 구축

-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어업 대응 방안 마련
- 농업부문 저탄소 인증 확대와 소비자 저탄소 인증제품 구매 촉진

③ 농축수산업 생산·사육 환경 관리

- 농업용수·농지 관리기준 마련과 관리 강화
- 동물복지형 축산 사육환경 조성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
- 수산물 오염원 관리 강화 및 처리시설 확충

다. 먹거리자원 순환기반 조성

■ 추진방향

- 가축분뇨 및 축산 악취 적정관리와 자원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자원화를 통한 환경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정량지표]

- 기후대응 작물 개발 확대
- 농업지역 에너지 절감시설(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증가
- 먹거리 폐기물(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 증가

① 축산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 축산농장 가축분뇨 퇴액비 적정관리 및 악취 저감 도모와 자원화 지원 시설 개선·확충

②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과 자원화 추진

- 세대별 RFID 종량기기 보급 확대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교육 강화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강화와 자원화 확대

2.4. 더불어 사는 먹거리

2.4.1. 배경 및 필요성

-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경제사회적 불균형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며, 지역 자생력을 상실하고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공동체가 증가하고 있음.

- 저성장 시대에 직면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먹거리 산업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농업분야의 경우 고령화,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농업인력 유입 감소와 함께 취업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 성장에 제약이 있으며, 식품·외식분야는 소규모 영세 구조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등 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 농업·농촌 및 먹거리에 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저성장 및 시장개방 시대에 직면하여 국내 먹거리산업의 가치·시장 유지 및 창출에 영향을 주며 정부의 먹거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도 영향을 줌. 그러나 농업·농촌 및 먹거리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지 못함.

2.4.2. 추진 과제

아젠다	더불어 사는 먹거리		
추진 과제	먹거리 경제 순환체계 확립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산 •지역 먹거리 경영체 육성 •식품·외식기업 성장과 농가소득 연계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먹거리산업 성장동력 구축 •먹거리산업 경쟁력 강화 •먹거리 분야 취창업 지원 •먹거리 분야 미래인력 육성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 •지역 공동체 자생력 강화 •도농교류와 체험·교육 활성화 •한국 식문화 인식 제고

가. 먹거리 경제순환 체계 확립

<p>■ 추진방향</p> <p>-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역 먹거리 경영체 육성, 식품·외식과 농업 간 연계 활성화, 로컬푸드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산업 성장과 함께 지역 활력을</p>
--

증진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

■ **성과지표**

[정량지표]

-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대
- 농촌융복합경영체 지구 증가
- 식품기업 연계 계약재배 농가 확대

①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산**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관련 농림사업 일괄 지원
 - 국가 먹거리 비전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추진 활성화
 - 관련 농림사업 일괄 지원 추진

② **지역 먹거리 경영체 육성**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및 사업 추진 체계화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성장 지원과 인증사업자 확대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 추진 방식 체계화

③ **식품·외식기업 성장과 농가 소득 연계 활성화**

- 식품기업 국산농산물 이용 확대 지원
 - 식품기업 연계 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단지 지원
 - 영세기업 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
 - 가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
 - 지역별·분야별 우수 외식업 지구 발굴·홍보

④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 직매장 확대, 온라인 이용 활성화, 소비자 신뢰 확보 통한 로컬푸드 수요 확산

- 대도시형 직매장, 1도 1대표 장터 등 다양한 로컬푸드·직거래 모델 개발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과 온라인 판매 확대
-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와 신뢰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나. 먹거리 산업 성장동력 구축

■ 추진방향

- 먹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창업·일자리 창출, 미래 인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먹거리 분야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먹거리 산업 역할 제고

■ 성과지표

[정량지표]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수산물식품 강소기업 확대
- 먹거리(식품) 분야 종사자 증가
- 먹거리(식품·외식)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 농수축산업 교육기관(농수축산계 고교, 대학) 취업률
- 농수산업 신규 경영인(후계농, 취창업자) 증가

① 먹거리산업 경쟁력 강화

- 농공상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관련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확대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법적근거 마련과 중기부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추진
- 우수 수산물식품업체 육성
 - 기술력·시장성을 보유한 소규모 우수 수산물식품 업체 선정·지원
-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 유망분야 집중 육성
 - 기능성소재 연구·개발 지원
 - 민간 고령친화식품 개발·투자 활성화 유도
 - 식품산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자금·마케팅 지원

② 먹거리 분야 취창업 지원

- 식품·외식 분야 창업과 청년 창업농 정착·성장 지원
 - 식품·외식분야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 식품·외식분야 창업희망자 실습기회 제공
- 청년 창업농 정착 및 성장 지원
 - 청년 창업농(창업형 후계농)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자금·교육 등 종합 지원
 - 청년 창업농 법인화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등으로 성장 유도
 - 청년 창업농 정착 여건 마련
- 농업·농촌 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 기반 고용 창출
 - 농촌 융복합산업 및 신활력 지구 확대, 농촌 유희시설의 창업 공간 제공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③ 먹거리 분야 미래인력 교육 활성화

- 청년 농업인 육성 교육 여건 개선 및 활성화
 - 한농대 교육 여건 개선, 미래농업선도고교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운영, 농업계학교 교육 지원 등 예비 인력 육성 추진
- 농고·농대, 귀농, 비농업분야 등 경로별 청년 유입 확대
 - 한농대 입학정원 증원, 교육과정 개편 및 입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 인재에게 양질의 교육 지원
 - 귀농희망 청년 장기교육 과정 활성화
-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분야 진로탐색 기회 확대
 - 농업, 농식품 등 먹거리 부문 초중고등학생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식생활교육과 연계한 먹거리 분야 진로 인식·이해 제고
 - 해양수산분야 교육과 진로탐색 기회 제공

다.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

■ **추진방향**

- 사회적농업 및 경제 활성화와 도농교류 활성화, 도시농업 및 먹거리 관련 교육·체험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자생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및 도농상생 가치와 우리나라 고유 및 지역 먹거리 가치와 먹거리 중요성 인식 제고

■ **성과지표**

[정량지표]

- 사회적농업 실천농장 확대
- 먹거리 분야 사회적 경제 확대
- 도시농업 참여자수 증가
- 도시텃밭 면적 증가
- 농업·농촌(전통식문화) 체험 경험 증가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확대

① 지역 공동체 자생력 강화

- 사회적농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농업·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의 공동체 자발적 해결과 먹거리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창출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육성
 -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 연구 및 관련 법령 제정 추진
 - 사회적농업 조직 기반 마련 지원
 -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② 도농교류와 체험·교육 활성화

- 농업·농촌 체험·교육과 도농상생기반 구축
 - 아동·청소년, 도시민의 농업·농촌 체험·교육과 교류기회 확대
 - 도시농업 활동 공간 확대 및 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③ 한식·식문화 인식·가치 제고

- 한식·식문화 확산과 소비기반 확대
 - “(가칭)한식진흥법”제정으로 한식 진흥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 시범운영과 국내외 한식 교육기관 수준 제고
 - 한식·한식식문화 관련 연구와 인력 전문화
- 한식·식문화 유산 발굴과 계승·발전
 - 한국형 식생활 실천, 식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식생활교육·체험사업 활성화
 - 학교급식과 연계 전통·향토식문화 계승 및 실천 지원
 - 전통·지역 음식·식문화 연구·개발 활성화
 - 지역 농어업, 떡거리 문화 유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자료 구축